

'코인 다단계' 등 금융·사이버사기 2.6만명 검거

경찰, 5개월간 6만여건 적발
직거래사기 전체의 50% 달해
'휴대폰 강' 등 불법 대출 여전

경찰이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불법사금융, 중고거래 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해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사수본부는 지난 3월29일부터 8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만1482건을 적발해 2만67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0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서는 불법사금융 관련 1359건을 적발해 1730명을 검거했다. 유사수신·다

단계는 363건에서 694명, 자본시장법 위반은 83건에서 215명이 각각 검거됐다.

특히 최근 유사수신과 투자사기에서는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한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범행이 잇따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봉사단체를 사칭해 피해자 456명에게서 409억원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초기에는 봉사 지원금과 투자금·수익금 등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전국에 11개 지부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특정 코인이 상장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사금융 분야에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하거나 소액대출을 미끼로 대출 회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범죄도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대출 회담자 명의의 휴대전화 236대, 4억5000만원 상당을 개통해 가로챈 뒤 허위 진실 신고를 통해 같은 규모의 보상 단말기 236대를 추가로 행인 일당 136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사이버사기에서는 직거래 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직거래 사기는 3만757건으로 전체 검거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관련자 7438명이

검거되고 253명이 구속됐다.

계열 사기는 4468건에서 1691명, 쇼핑물 사기는 4365건에서 780명이 각각 검거됐다.

범행 방식도 점차 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개인 간 중고거래를 가장해 대금을 가로챈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해외에 범행 거점을 마련하고 기망책과 송금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형 사이버사기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집중단속과 별도로 전국 261개 관서에서 284개팀, 1006명 규모의 '악성사기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담 인력 78명을 추가 배치했다.

추적팀은 사기 범죄 지명수배·통보자와 관리미체 사건 피의자 등을 추적해 최근 6개월 동안

4204건과 관련된 2318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련성 쌍둥이 형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불법계좌를 피해 온 수배자를 20곳이 넘는 PC방을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 가상의 인물로 신분을 세탁한 채 7년간 도피해 온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전 검거하기도 했다.

올해 1~8월 전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9만1746건, 검거 건수는 17만9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7131건이 발생해 17만8560건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발생과 검거 건수 모두 감소했다.

경찰은 오는 10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소진 기자 jin@sminilbo.co.kr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751건 (최근 5년간) 컴포즈·메가MGC 가맹점 절반 차지

'위생교육 미이수' 전체의 48%

국내 매점상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7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위 10개 브랜드의 적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 ▲2024년 169건 ▲2025년 161건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194건, 메가커피가 184건으로 두 브

랜드를 합쳐 378건에 달했다. 전체 751건의 50.3%다.

이어 ▲맥다방 65건 ▲더버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위생교육 미이수 364건(48.5%) ▲기준 및 규격 위반 169건(22.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조장전단 미실시 43건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 4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3건 ▲시설기준 위반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명준 기자 yyj@sminilbo.co.kr

대형마트서 5억대 귀금속 절도 20대 구속 송치... 단독범행 추정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여원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아간건 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대형마트에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를 수사했으나 공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 구속 당시 혐의대로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경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14K·18K 금팔찌 173점(업주 추산 5억여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자이크 달린 우비와 마스크를 얼굴을 가린 채 진열대 상부 유리를 뚫기로 하고 귀금속상을 쫓겨 도주했다가 범행 12시간 만에 서을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대형마트 건물 내부에 10분가량 머물렀으나 매장에 진입해 귀금속을 훔쳐 담는 데는 1분 30초가량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생각과 때문에 묻어 필요해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해당 매장에 가게 됐고 혼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한=문천식 기자 mcs@sminilbo.co.kr



명절 앞두고 큰절 연습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시을 앞둔 21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큰절을 배우며 명절을 체험하고 있다.

휴대폰 개통후 허위 분실신고... 9억 상당 472대 쟁거

30대 '휴대폰강' 업자 구속송치
저신용자 135명 끌어들이 범행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소액 대출을 해주는 속칭 '휴대폰강'으로 고가 휴대폰과 472대를 쟁거 업자와 개통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보령사기방지 특별법,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휴대폰 개통자 1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에서 대부업 등록을 해놓고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고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 저신용자 135명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개통한 휴대폰 가운데 236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분실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허

위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휴대폰과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고가 휴대폰과 236대를 추가 확보해 해외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모두 9억여원 상당의 휴대폰과 472대를 쟁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과 개통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은 기기 1대당 20만원에서 100만원에 그쳤지만, A씨는 개통사 명의의 할부자 남는 점을 이용해 고가 단말기를 확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에 대해 범인의 기소 전 추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관할지에서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아울러 휴대폰과 통신사와 보험사에는 관련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개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며 "장물업자 등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사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최성일 기자 look7780@sminilbo.co.kr

5년간 347억 투입 기상장비 국산화

기상청, 기술자립화 R&D 강화
공공 주도형 실증 지원 체계도

기상청이 국산 기상장비의 연구 개발부터 현장 실증, 공공시장 진입, 해외 인증과 수출까지 전과정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장비의 기술 자립과 국내 기상기업을 상품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장비 연구개발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상용화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우선 외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상장비의 기술 자립을 위해 올해 5년간 약 347억원을 투입한다. 위임사업 대응 이음·원격

관측기술 개발과 국민 생활환경 기반 고밀도 관측체계 고도화, 천리안위성 5호 우주기상 탑재체 국산화 개발 등이 주요 과제다.

개발된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성능 검증과 품질보증도 강화한다. 기상청이 국산 장비를 직접 사용해 성능을 검증하는 '공공 주도형 실증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기업이 성능시험을 진행할 경우 시설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국유재산 사용료도 면제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는 기술 현지화와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성능평가 결과도 제공한다.

문민호 기자 mmh@sminilbo.co.kr

'전북교육감 선거운동 혐의' 교사 불송치

공무원 중립 위반 확인 못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초선 전북교육감의 선거 운동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지교사가 불송치됐다.

전북 전주안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혐의로 입건된 교사 A씨를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에 한 카페에서 열린 상담포자 간담회에서 '전 예비후보 캠프'라고 표기된 명패를 사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

의를 받았다.

당시 전 교육감측은 "간담회를 준비한 실무자의 착오로 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사 후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주 A씨를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명패는 간담회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명패를 두르고 지시했다는 정황도 확인하지 못해 공무원 중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minilbo.co.kr



인천대학교 만원릴레이 안내

만원릴레이는 대학발전기금으로 1만원을 기부하고 그 기부가 이어지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후원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대학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캠페인 → 만원릴레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fund.inu.ac.kr
032-835-8080

